‘若無호남 是無대권’ 호남 공들이기

〈호남이 없으면 대권도 없다〉

관망하는 호남 민심 … 애타는 대권주자들

손학규·문재인·김두관 등 잇단 광주 방문

범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주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대권 후보들의 광주행이 잇따르는 등 호남지역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망하는 호남 민심=지난 1년여 동안 범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사이에서 관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추석 전까지는 손 전 대표가 야권 대선후보로 선두를 달렸다. 지난 2010년 10월 전당대회에서 호남지역 당심의 힘으로 당 대표가 된 이후 줄곧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손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호남 민심도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광주일보의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손 전 대표는 26.4%, 문 의원은 25.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며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안 원장이 범야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후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안 원장과 문 의원 사이에 있었다. 지난 3월말 광주일보 여론조사(범야권후보)에서는 ‘문재인 29.9%, 안철수 29.0%, 손학규 16.6%’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후보들이 대거 실패하면서 또다시 바뀌었다. 안 원장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간 반면 문 의원이 지지도가 낮아진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5~16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33.3%, 문재인 21.1%, 손학규 12.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호남 민심을 잡아라=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최우선적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호남민심을 잡아야 당 후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빅3’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그는 5·18 민주묘지를 방문, “광주정신 받들어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민생현안도 챙겼다.

지난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의원도 첫 지역 행보로 광주·전남을 선택했다. 그는 2박3일 일정으로 20일 광주를 방문했다. 방문 첫날에는 광주에서 전남도당 및 광주시당에서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양동시장과 금남지하상가, 광주 남구의 전통 고싸움 전수마을인 칠석마을 등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21일에는 새벽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뒤 문 의원의 ‘뿌리’인 남평 문씨(文氏) 문중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호남 공들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 측근은 “광주 출판기념회는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면서도 “대선 출마 선언 전후로 민주당의 고향인 광주에서 인사는 당연히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쪽선 설명회 한 쪽선 반대집회 20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주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패널들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 등에 대해 설명〈사진 위〉하고 있는 가운데 화순·담양 주민들이 “재산권 보장”등을 요구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국립공원 지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지막 쓴소리

윤봉근 광주시의장 “총인비리 등 시정 난맥 실망”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마지막 쓴소리를 했다. 광주시의회 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는 마지막인 208회 임시회 폐회사에서다.

윤 의장은 20일 “광주시정이 그동안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를 비롯해 몇 가지 난맥상을 보여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시는 앞으로 통합과 조정의 기지를 발휘해 행정과 정무적 능력이 잘 조화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연정수장 산성 수돗물 공급 사태 등을 언급하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더욱 심기일전해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당면 현안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 확보와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장은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계 등 공직분야의 개혁은 쉽지 않다”며 “광주교육이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려면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의장은 “요즘 광주교육은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시민과 멀어져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늦더라도 시민의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목표에 이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제6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품위 있는 의회,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회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소 부족했지만,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역동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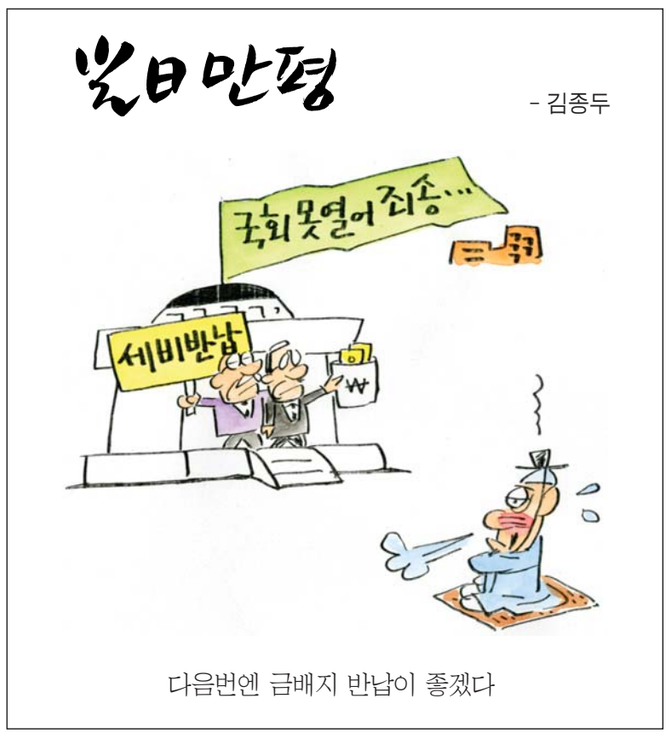
박인화 교육의원 “진보교육감 2년 실력광주 추락”

광주시의회 박인화(광산) 교육의원은 20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초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호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많은 성과를 낸 점도 있지만, ‘실력 광주 위상 추락’ 등 몇가지 문제점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년 연속 전국 최상위라는 ‘실력 광주’의 위상이 추락해 학부모를 비롯한 광주시민 모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된 채 자율이란 미명아래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무작정 내몰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열을 무시한 파격적인 코드 인사와 공감대를 잃어버린 인사원칙은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음번엔 금배지 반납이 좋겠다

무등산 국립공원 면적 82.30㎢로 확대

탐방로 15개 신설

광주시가 추진해 왔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환경부가 20일 발표한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안)는 기존 도립공원 면적인 30.23㎢보다 2.5배 가량 넓어진 총 82.30㎢이다. 식영정과 소쇄원은 해당 경계안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안은 82.30㎢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광주 동구는 21.07㎢(25.60%) ▲광주 북구 28.85㎢(35.05%) ▲담양 14.76㎢(17.93%) ▲화순은 17.62㎢(21.41%)의 면적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새로 지정되는 국립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광주지역에 치중됐다.

용도지구(안)은 공원자연환경지구가 67.66㎢(82.21%)로, 국립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공원자연보존지구가 13.04㎢(15.85%) ▲증심사·약사암·규봉암·원효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 0.68㎢(0.82%) ▲배재·화암·평촌마을 등 공원마을지구 0.65㎢(0.79%) ▲증심사 및 원효사지구 등 집단시설지구 0.27㎢(0.33%)로 구성돼 있다.

주요시설 변화로는 주요 탐방로 15개 구간을 신설해 기존 16개였던 주요 탐방로가 총 31개로 늘어나게 되며, 3곳의 주요 출입구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무등산 국립공원 경계(안)은 법적 보전지역(15개)와 자연공원 지정기준(5개)를 적용한 경계(102.22㎢)안에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면적이 82.30㎢로 축소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와 동부사무소를 두고 원효사 분소와 담양 분소를 만드는 조직(안)을 계획중이다.

정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00명을 계획하고 있다. 훼손지 복구와 탐방로 정비, 공원시설 설치 등의 예산은 오는 2017년까지 총 972억2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